‘중동전쟁 장기화’ 중소건설사 고사 위기 확산

공사비 급등에 자재난 겹쳐 이중고

지방 폐업 급증·건설업 양극화 심화

“공공 발주 중소업체 참여 확대해야”

미분양 등으로 돈줄이 막힌 중소건설사들이 중동전쟁 장기화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비 급등·자재난 겹치며 중소건설사 직격탄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지역 분쟁이 두 달을 넘기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를 대로 오른 공사비와 자재 수급 불안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치)는 134.42로 전월 대비 0.49% 상승했다. 작년 같은 달보단 2.52% 올랐다.

특히 폴리프로필렌수지(18.1%), 폴리에스터수지(13.2%), PVC수지(12.1%), 아스팔트(10.2%), 에폭시수지(10.1%) 등 석유화학계 품목 가격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은 고금리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였는데, 전쟁 장기화로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대형은 버티고 중소는 타격…업계 양극화 뚜렷

악재가 겹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천88건으로, 2021년(718건) 대비 5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하도급 업체인 전문공사업체가 85.2%(927곳)를 차지했다.

대형건설사는 자금력과 사업 구조 다변화를 바탕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전쟁 여파에 따른 손실을 일부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건설사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 구조다.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주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가데이터처 수주통계(기성액 상위 54% 기업 대상)와 대한건설협회 통계 간 수주액 차이는 약 15조7천억원으로, 2021년(34조2천억원)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소규모 기업의 수주 실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수주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수주액은 2023년 87조4천억원, 2024년 114조3천억원, 2025년 128조4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 수주는 89조원, 81조2천억원, 77조원으로 감소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기업 중심의 수주 확대와 중소업체 수주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시장 내 수주 구조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소업체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발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동 긴장 재고조에 국제유가 급등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등한 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0% 상승했다. /연합뉴스

역대급 국내 증시 ‘불장’에 어린이계좌 개설 봇물

대신증권, 0-9세 신규계좌수 연초 2배로

역대급 ‘불장’에 9세 이하 어린이 주식계좌 개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신증권이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대비 지난달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은 119.2%에 달했다. 정확한 계좌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30대(352.6%)와 20대(308.4%), 40대(220.8%)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10대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은 101.1%였다.

반면에 60대는 증가율이 14.7%에 그쳤고, 50대 45.6%, 60대 29.7%, 80대 31.9% 등 50대 이후부터는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90대 이상은 25.0% 감소했다.

지난달 신규 계좌의 투자 잔액은 지난 1월보다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0-9세는 6.0%, 10대는 28.1% 각각 감소했다.

신규 계좌 수가 늘었는데 총 투자 잔액은 감소했다는 건 소액 계좌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자녀 명의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신한투자증권도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 잔고는 약 1천만원이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이 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부모 투자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금융교육, 이벤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5월 자녀를 위한 자산 증여 방법으로 상장지수펀드 적립식 투자를 제시하는 ‘KODEX 증여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녀 명의 계좌가 금융 교육은 물론, 중장기 자산 관리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추세”라며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5월 6일부터 16개 보험사, 일괄적으로 5세대 상품 판매

급여의료비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구분,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차등화

자기부담률	**입원** 20% **통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동, 의료기관과 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임신·출산·발달장애	급여의료비 신규 보장

비급여

중증 비급여(특약1)·비중증 비급여(특약2), 보상한도·자기부담률 차등화

	중증(특약1)	비중증(특약2)
보상한도	연간 5,000만 원 통원 회당 20만 원 입원 한도 없음	연간 1,000만 원 통원 일당 20만 원 입원 회당 300만 원
자기부담률	입원 30% 통원 30% 혹은 3만원	입원 50% 통원 50% 혹은 5만원
자기부담 한도	입원(상종·종병) 500만원 신설	없음

1~5세대 실손보험 비교

5세대 보험료 1·2세대 대비 ↓50%~ 4세대 대비 ↓30%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자기부담률	0%	10~20%	10~30%	급여 10~20% 비급여 30%	급여 20%~ 비급여 50%

연합뉴스 자료: 금융위원회

비급여 보장 축소…5세대 실손의료보험 오늘 출시

도수치료 빠지고 발달장애 추가

11월에 선택형·갈아타기 할인

과잉치료 논란이 있는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된다.

5세대는 도수치료 등의 보장은 빠지는 대신 발달장애와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이 새로 추가됐다. 1·2세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 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6일부터 16개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5세대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신한EZ손보는 내부 사정으로 다음 달 1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출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존 실손보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 등)와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해 과다 이용을 부추겼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가입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작년 말 보험사 14곳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했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됐다.

5세대는 급여와 중증 질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비중증 보장은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급여는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나눠 실손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특히 신규 항목으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육아 관련 필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나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률를 차등화했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기존 1-4세대보다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와 비교하면 약 30%,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인하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7.5%로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는 연간 약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내연기관 이륜차 공제보험료(약 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조합은 교통안전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 장착 등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